

여야 ‘윤석열 청문 보고서’ 채택 공방

민주 “검찰개혁 책임자”

한국당 “후보 자진 사퇴”

평화당 “당론으로 찬성”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책임자론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책임자”라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

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뚝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윤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자질 면에서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은 윤 후보자의 추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로 밝혀졌다”며 “엄정한 죄이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北 목선 국조로 실체 밝혀야” ... 여 “과도한 정쟁”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여야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발 황당함 사건”이라며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구백 의원은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야당이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맞받았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대책이 무엇이라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냐’는 질의에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협할 수 있는 발

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회전문 인사’가 아닌 탕평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주문에는 “노력하겠다”며 “그런데 뜻밖에도 (인사)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며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의 북한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여러 채널을 통해 참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아직 긍정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추경’ 19일 처리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호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일 종합정책 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돈을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해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바른미래당은 국제 발행 없는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다가 경제 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한국당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계외국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제강형 추경으로 대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금 정부는 3년에 걸쳐 국민의 세금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려고 상시 추경을 하고 있다”며 “국제발행을 통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오늘 대기업 30개사 간담회

日 수출규제 대처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

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대상 기업의 기준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수출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추가로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대기업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크게 산업통상 분야와 외교 분야로 나눠 대응하는 가운데 민간 공조를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이주여성 특위 구성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1만1709명)로 많고 등록 외국인도 3만3000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이후 부러부러 마련한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장 이주여성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전남도당은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남지역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2일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위 발족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현숙 전남도당 여성위원장과 이현창 전남도의원(다문화위원장)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은숙 목포지역아동센터장, 백영남 인권지원상담소장, 필리핀-베트남 이주여성 등도 참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566-9988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4 0 1 7 4 9 0 0 8

J1+ 3 point 4 0 0 0 0 0 0 0 0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4 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4 상무대로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